

우승희 “청년 돌아오는 전남” 되레 청년 1만명 줄어” 양영복 “전남개발공사 호텔 매각 지연... 경영난 가중”

전남도의회 도정질의
“무안공항-군공항 통합 반대”
이낙연 지사 입장 재확인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군공항 통합문제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전남개발공사 소유 호텔매각 문제 등이 주로 지적됐다.

◇무안공항, 광주 군공항과 통합 반대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과거 입장 표명과 관련해 변화가 없느냐’는 정영덕(무안 2) 의원의 질의에 “지금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민간공항과 함께 있다는 것인데,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 군사시설 이전 사례를 보면 주민 반대에도 밀어붙이기도 한다”며 “광주시는 군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조지를 개편하고 전담팀을 마련하는데, 전남도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것은 전남으로 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 등을 파악하는 대응팀 정도는 필요하다는 요구에 이 지사는 “그 정도는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개발제한 구역은 도심의 쾌적한 환경 조성 기능도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 목적도 있다”며 “광주 군사시설은 광주가 떠안아야지 전남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남개발공사 호텔 매각 또다시 도마 =양영복 의원(무안1)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전남개발공사의 호텔사업장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한옥호텔인 여수 오동재와 영암 영산재, 해남 땅끝호텔을 운영 중인데, 적자가 지속하면서 1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산재와 오동재는 두 차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의 협의 중이며 땅끝호텔은 일곱 차례 유찰 끝에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을 협의 중이다. 매각 금액은 영산재(116억원)·오동재(271억원)·땅끝호텔(40억원) 등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민간 매각을 추진하되, 운영 방식을 변경해 적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년 인구 감소시각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 =우승희(영암1) 의원은 이날 “전남도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 목표로 정했는데도, 오히려 청년 인구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15~39세 청년 인구는 민선6기가 시작된 지난 2014년 7월 55만7952명→54만4499명(올 들어 지난 8월 31일 현재)으로 2.4%인 1만3453명이 줄었다.

우 의원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청년박람회나 전남 청년 제안대회 등을 열어 청년들의 활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고용 확대와 일자리 불일치 해소 등 각종 대책을 마련,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겠다”고 답했다.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출범 눈앞 특별법 제정 청원·피해보상 중점

여수·순천 10·19 사건
10일 특위 구성안 통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위원회’(이하 여순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정부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진 제4·3 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등과는 달리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여·순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여·순 사건 보상문제 등을 중점으로 다룰 ‘여·순 사건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0일 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순 특위’는 다음날인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6개월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의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될 이번 ‘여순 특위’는 진

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활동을 포함해 보상문제를 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 9대 때 해당 특위 활동이 진상규명 조사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활동과 추모공원 조성 및 희생자 가족 피해보상 등 전남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주요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지난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여·순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지원 등을 권고했으나 이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순 특위’의 특별법 청원활동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여순 특위’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자 윤문철(여수 1, 국민의당) 도의원은 “그간 민간단체 중심으로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힘든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굴절돼 왔던 여·순 사건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임시회 18일까지 시정질문·조례안 심사

광주시의회는 5일 제252회 임시회 개최식을 갖고 오는 18일까지 1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도 이어진다.

오는 11일 이정현(국민의당·광산1)·반재신(더불어민주당·북구1)의원이, 12일에는 조세철(더민주·동구2)·문태환(국민의당·광산2) 의원, 13일 문상필(더민주·북구3)·김옥자(국민의당·광산3)의원 등이 시정질에 나선다.

시의회는 또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727억원(누리과정예산 등)을 심사하며, 조례안 32건, 동의안 12건 등 일반안건 44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는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이외 일반 사회재난지역 구호와 복구 지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외국인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과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삶디자인센터의 사용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처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장애인근로사업장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사드 반대” 김천시민들 상경집회 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김천시민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상경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립미술관 설계 외국인도 지원 가능

17일까지 국제 공모
전남도가 구 광양역사 일원에 들어설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5일 국제 설계공모에 들어갔다. 참신한 디자인 발굴과 시대 조류 반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 방식을 결정

최대화 예정이다. 이후 12월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작 업체엔 미술관 건립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1점과 가작 1점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설계자가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또는 전남도립미술관 국제설계공모 공식 누리집(www.jnartmuseum.co.kr)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18일 현장 설명회를

지방정가

김동찬, 등하교 전세버스 블랙박스 장착안 받의

광주시의회 김동찬(더불어민주당·북구 5)의원은 산업계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길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장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교통사고 예방과 조사를 위해 전세버스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택시

8000여대, 버스 970여대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을 했다. 당시 시비(70~80%), 자부담(20~30%)로 추진했다. 현재 광주지역 전세버스는 110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광주시와 시의회는 전세버스 장착지원을 시비 50%, 자부담 50%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남, 향교 전통문화 계승 활성화 제안

광주시의회 주경남(더불어민주당·서구 4) 의원은 5일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통의례행사 ▲전통문화 계승사업 ▲전통문화채널 ▲인문 ▲역사·문화·예술교육 등 향교의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향교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출내역 등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특별 시비를 없애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주 의원은 “소중한 전통문화 계승과 유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인문 교육의 활성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발의 이유를 밝혔다.

2016 국풍대제전

2016. 10. 21. 금 ~ 11. 6. 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문의 |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Tel | 061)320-3364 www.hampyeong.go.kr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국화동호회